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2013 ADEX(무기전시회) 대응 캠페인





CONTENTS 목차

왜 아이들은 총을 들게 되었을까? 01

무기에 환호하는 사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04

무기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산무기개발은 언제나 바람직한가?

공격적 무기도입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가져 오는가

몹쓸무기 나쁜무기 비싼무기 12

전투기 / 국가예산 축내는 전투기 사업

헬기 / 과잉투자로 예산만 낭비하는 헬기들

무인공격기 /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

전차 / 고성능 전차 꼭 필요한가?

이지스함 / 평화에 반하는 대양해군의 꿈

MD체계 / 21세기 모순(矛盾) 전쟁

확산탄 / 죽음의 비

소형무기 / 민간인 살상 제조기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 40

확산탄금지협약 / 비인도적 무기생산 중단하라

무기거래조약 / 무책임한 무기거래 중단하라

No 핵무기 Yes 비핵지대 / 비핵지대, 핵무기 얼씬도 하지마

실현가능한 꿈, 군축 /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평화국가 / 시민이 만드는 평화



병영캠프에서 K2 소총을 직접 조작하고 겨냥하는 어린이들

왜 어린이들은 총을 들게 되었을까?

사진 속 어린이들이 쥐고 있는 것은

장난감 총이 아닙니다. 실제 무기입니다.

군대체험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살상무기를 직접 조작하고 겨냥해보는 모습입니다. 최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준군사훈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에 이끌려 병영캠프에 참가합니다. 캠프에서 집단적으로 살상용 무기(서바이벌 게임 등)를 체험하고, 적의 개념을 강조하는 안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살상무기를 체험하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그 사회의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무기에 환호하는 사회

국제인권법 위배되는 군대체험 교육

최근 5년간 병영캠프를 다녀온 초·중·고생은 11만 1397명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가 2011년부터 안보의식 고취라는 이름하에 실제 K2소총, 전차, 헬기 등 살상무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안보교육 정책을 시행하면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견학과 체력 단련도 포함되어 있지만, “적”에 대한 적개심 주입 교육과 “군사체험” 뿐만 아니라, 살상무기와 살상용 군사장비의 체험, 직접적인 조작과 준화기(이른바 “서바이벌장비”) 실제 사용, 그리고 실탄사격과 특공무술과 같은 인명살상 기술을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무기가 가진 폭력성과 대인살상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게 하고, 무방비의 어린이들에게 살상무기를 직접 체험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18세 이전까지의 모든 교육에서 폭력과 적개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됩니다. 더구나 폭력성을 이유로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내용의 서든어택, 스페셜포스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안보교육은 정부 정책과도 모순됩니다.



어린이들에게 무기 쥐어주는 어른들

어린이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교육이 우리 사회에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형이라고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린이들의 손에 살상무기들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이터에서 각종 BB탄 총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장난감 가게에는 수많은 장난감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잘 죽이는 무기에 환호한 나머지 아무 거리낌 없이 무기전시회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적 이득만 가져온다면 무기수출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산업을 장려하고 무기수출 대국이 되는 것을 국정과제로 내세웁니다. 무기생산 기업들은 사람 죽이는 무기라는 본질을 가리고 있으며 무기산업을 ‘첨단기술’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합니다.

우리가 수출한 무기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과 폭탄은 TV나 핸드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결국 지구 어딘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무기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10만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낸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정부군과 반군에 끊임없이 무기를 제공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분쟁지역에 무기를 적극 수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무책임한 일입니다.

평화, 무기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과거 한국은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오늘날 국제사회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무기공급을 통한 경제적 이득만 취하려 하는 것은 과거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한반도는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정전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위기에 닥쳤을 때 다른 국가들이 이를 무기수출의 기회로만 여긴다면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되고 분쟁발발 가능성을 높여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무기산업을 확대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보다 무기산업이 분쟁해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성찰하고 엄격한 윤리적 기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STOP ADEX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하고
무기들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을 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공격적 무기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무기를, 더 강한 무기를 갖게 되면
평화로워질까요?

무기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산무기개발은 언제나 바람직한가?
공격적 무기도입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가져 오는가



무기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의 무기산업 육성

역대 한국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2011년 현재 17위)하며 분쟁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국정 목표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수출은 방위산업체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무기산업을 육성하고 무기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산업의 ‘비즈니스 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꾸준히 대규모 무기전시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방위산업전시회’라고 불리는 이 전시회에는 전 세계의 대표적 무기제조 업체들과 국방 관계자들이 참가해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전시하고 거래합니다.

방위산업전시회=살상무기전시회

그러나 ‘방위산업전시회’란 명칭은 그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방위’란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키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방위산업전시회’에 전시되는 무기들은 방어적 목적의 다소 선량한 수단인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전시회에 전시되는 무기들은 모두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살상무기들입니다. 심지어는 국제사회가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한 확산탄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 무기들도 다수 전시됩니다. 군수업체, 무기상들이 판매하는 성능 좋은 무기란 결국 사람을 잘 죽이는 살인무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첨단과학, 수출품목이란 이름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무기는 결코 살인도구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파키스탄 지역 폭탄 테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 2013 영국 런던무기박람회 (London Arms Fair - Defence &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 (DSEi))에 반대하는 Stop Arms Fair 캠페인 활동가들

무기사용으로 인한 분쟁지역 주민들의 고통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과 홍보에 힘입어 이 살상무기전시회를 찾는 관람객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관람객 동원은 무기산업의 이면에도 불구하고 무기산업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최첨단 무기에 환호하며 어린이들을 무기전시회에 데려갑니다. 그러나 총과 탱크, 각종 최신무기를 만지작거리는 어린이에게 이 무기가 어떤 살상무기인지, 무기가 사용되는 분쟁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부 역시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무관심합니다. 수주결과를 치켜세우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하는 데 그칠 뿐 무기수출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는 방위산업 지양해야

그러나 한국이 무기 수출 대상국가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는 터키,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가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쟁과 고통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방위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은 과연 윤리적으로, 국제 평화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국제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분쟁에 쓰이거나 소수 종족을 짓밟는 데 쓰일 수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국산 무기개발은 언제나 바람직한가?

무기산업 육성은 윤리적으로 옳은가?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무기산업을 육성해 왔고 국산기술 개발을 장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련장, 헬기, 전투기,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 등 각종 무기들을 국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개발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한 개발 시도는 추가 예산 투입, 비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산 개발 계획은 항상 기술 도달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과잉 생산의 명분이 되고 있는 무기 수출

국산 무기는 일단 생산에 착수하면 공장이 유지될 정도의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 생산량에 맞춰 일정량 이상의 무기를 반드시 사야 하므로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 유지 수단이 됩니다. 더구나 군과 방위산업체는 무기의 국산개발안을 승인받고 생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국내 판매 외에도 해외수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무기산업의 장래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기 등의 많은 수출 실패 사례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국산개발 무기의 수출 가능성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무리한 국산 개발이 불러온 부실,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게다가 부품 및 설계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군과 업체가 결탁된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2011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14개 업체, 319개 사업, 8280억원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품 개발에 실패하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전체 무기 개발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부품 생산업체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낳을 수 있습니다. 단 1개 부품의 개발 차질도 전체 공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개발 계획이 계속 중단되고 연기되고 있는 차기 전차 K-2 개발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장된 군수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는 무기 수출은 방위산업체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사 부문의 지출이 다른 부문들에 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균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훨씬 적은 편입니다. 1조원의 예산 투입시, 군사 부문은 8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데 반해 대체에너지 분야에 쓰일 경우에는 12만2000개, 교육 부문에는 2만개, 보건 부문에는 1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Pollen and Garrett-Peltier, 2009). 오히려 막대한 군사비 부담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적 무기도입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가져 오는가?

세계적으로도 이미 막강한 육군 무기들, 추가적인 무기 증강은 불필요

세계군사자료평가평회의 등이 실시하는 세계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 육군의 군사력은 세계 3~4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에도 전력 열세라는 이유로 끊임 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무기 증강이 가져올 기회비용(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 생겼을 이익)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월등한 전력

한국 육군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북한이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후해 질적으로 한국군 무기가 훨씬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전차만 하더라도 북한은 41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부분의 전차는 한국이 1980년대에 개발한 K1 전차보다 구형입니다. 그럼에도 K1A1 전차 성능개량 및 양산, K-2 차기 전차 개발과 양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육군 군사력 순위 출처 : 세계군사보고서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한국
4위	중국
5위	독일
6위	프랑스
7위	영국
8위	이스라엘
9위	인도



최근 한국은 능동적 억제 전략을 수립하고 압도적 공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대규모 첨단무기 도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능동적 억제전략에 따른 막대한 공격형 무기도입

정부는 2009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무기 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국방부는 선제 타격과 공격적 전략을 골자로 하는 ‘적극적 억제전략’ 지침을 발표했고 2013년에는 여기서 더 나아간 무시무시한 ‘능동적 억제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킬체인 구축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가 그것입니다. 이는 일련의 압도적 공격 능력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첨단무기 도입 사업들이 그것입니다. 육군 차원에서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증강, 차기 전차(K-2) 개발, 공격헬기(KAH) 개발 및 대형공격헬기 구입, 차기 다련장(MLRS) 개발, 차기 장갑차(K-21) 개발로, 해군 차원에서는 이지스함, 차기 구축함(KDX), 차기 잠수함(KSS-II/III), 차기 호위함, 차기 고속정, 차기 상륙함, 상륙 기동헬기, 해상작전헬기 등의 개발과 획득으로, 공군 차원에서는 차기 전투기(FX), 한국형 전투기(KF-X), 정밀유도폭탄,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의 개발 및 도입으로 주요 공격 무기들을 고비용의 첨단무기로 새로 바꾸고 있습니다.

공격형 무기 도입과 선제타격 개념, 안보가 아니라 대립만 부추길 위험

공격형 무기의 대량 획득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자체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방어를 위한 적정 수준의 군사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공격적 계획과 첨단무기들의 전략적 구축은 한반도 평화 노력이 아니라 군사적 대립을 유도할 뿐이며 동아시아의 지역적 갈등 역시 부추기게 할 것입니다.

주요 무기 증강 계획 출처 : 국방부,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육군	지대지 탄도미사일 증강 등 차기 전차(K-2) 개발 공격헬기(KAH) 개발 및 대형공격헬기 구입 차기 다련장(MLRS) 개발 차기 장갑차(K-21) 개발
해군	이지스함 사업 차기 구축함(KDX) 사업 차기 잠수함(KSS-II/III) 사업 차기 호위함 사업 차기 고속정 사업 차기 상륙함 사업 상륙 기동헬기 사업 해상 작전헬기 사업 등
공군	차기 전투기(FX) 사업 정밀유도폭탄 사업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등 고고도 무인기 및 중고도 무인기 사업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몹쓸무기 나쁜무기 비싼무기

민간인 피해가 큰 비인도적 무기,
고비용이 들어가는 예산 축내는 비싼 무기,
첨단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기들은 사실 치명적인
파괴력과 정밀성을 갖춘 살상무기라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더 좋은 성능’이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력’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무기사용으로 인한 민간인의 희생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원격 무기조작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전투기 / 국가예산 축내는 전투기 사업
헬기 / 과잉투자로 예산만 낭비하는 헬기들
무인공격기 /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
전차 / 고성능 전차 꼭 필요한가?
이지스함 / 평화에 반하는 대양해군의 꿈
MD체계 / 21세기 모순(矛盾) 전쟁
확산탄 / 죽음의 비
소형무기 / 민간인 살상 제조기

국가예산 축내는 전투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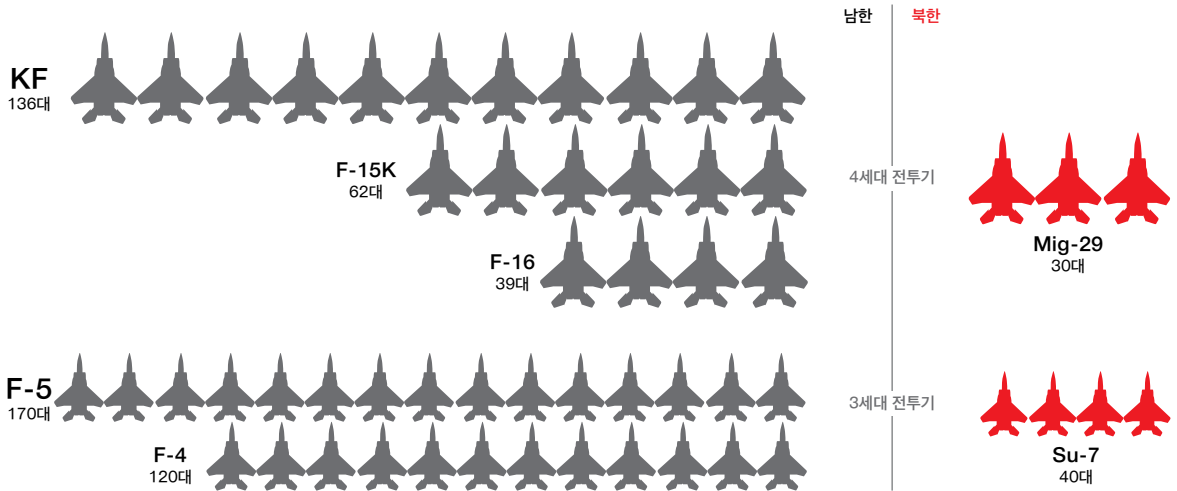
현대전에서 공군 전투기가 차지하는 전략적, 기술적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투기로 인한 공습은 적군과 민간인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간인에 대한 오폭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부차적 피해'로 치부하고 경쟁적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전투기를 개발하고 도입하려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편 스텔스 기능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습은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는 전투행위다. 9천 미터 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조종사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지르는 비명을 듣지 못한다.

고비용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최근 추진되고 있는 3차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은 애초에 북에 비해 월등한 공군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검증절차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최종 기종선정이 부결된 이후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스텔스 기능의 기종을 구매해야 된다는 군의 압력이 크지만, 대표적 스텔스기인 F-35 구입은 재정적 부담은 물론 아직 개발중인 미제기란 점, 지나치게 공격적 전략 강화 등의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전투기 전력 비교 (4세대 및 기타 주력 전투기)

한국의 전투기 전력은 이미 충분하며, 따라서
더 이상의 전투기 도입은 과잉 전력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군비 경쟁을 불러 올 수 있음

북한에 비해 월등한 한국 공군전력

- 현재 한국의 공군전력은 북한의 공군력을 압도하고 있어 차기전투기 도입이 필수적인지 의문임. 남한의 경우 3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전체 전투기 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75% 이상이 2세대 이하 전투기로 1950~60년대 만들어진 구형 전투기가 주종임. 우리나라 방어전략을 위해 어느 정도의 무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진행되는 전투기 도입 사업은 다른 나라에 위협으로 해석되어 군사적 대립을 부추김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없음.

한반도에 군비경쟁과 갈등을 초래하는 차기 전투기 사업

-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기 전투기 도입은 대북 선제공격 내용이 포함된 '능동적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만약 차기 전투기가 유사시 실제로 선제타격을 감행할 경우 북의 반격을 야기하여 전면전을 초래할 수도 있음. 게다가 차기 전투기 사업 대상기종들 모두 작전반경, 항속거리, 레이더 탐색거리 모두 북한 전역을 넘어 중국의 동북부까지 범위로 하고 있어 북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과 대응을 불러일으켜 한반도와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엄청난 세금투입 사업임에도 부실한 검증과정

- 지난 1차 사업에서는 전투기 기종 제안서 평가에만 6개월이 걸렸으나, 지난 2012년 3차 사업이 진행될 당시 제안서 평가가 12일 만에 종료됨. 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조차 F-35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선정대상 기종 중 하나인 F-35의 성능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음.



막대한 비용에도 결함 많은 F-35

- 시험용 전투기가 없어 실제 운행시험을 할 수 없음
- 미 국방부 감찰단 363개의 결함 발견했다고 발표
- 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조차도 비용 문제로 구입을 포기하는 상황

영국 2011년 10월 도입 포기 고려

캐나다 2012년 12월 구입 철회 발표

덴마크 2013년 3월 도입 계획 취소 발표

일본 산케이신문 "F-35 도입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도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F-35 : 막대한 유지비

방사청에 따르면 F-35 60대 도입비용은 15조원 가량 예상됨

그러나 이를 30년간 운용하는 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약 3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차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입찰기종이었던
록히드마틴사의 F-35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노후된 공군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사업)이 추진되어왔으나, 2007년 한국 개발연구원(KDI)은 비용과다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 도달 가능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국방연구원(KIDA)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9년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하향 조정하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를 부담하고 50대를 구매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국제 공동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복 과잉 투자

- 공군력은 북에 비해 월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투기 개발은 과잉 투자임. 이미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중복적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5조원 이상을 쓰려 하고 있음. 이 사업들은 획득 시기마저 겹치고 있어 과도한 중복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기술 개발 문제

- 확실한 기술 기반도 없고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할 분야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 기술과 경험의 부족으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전력상 필요하지 않은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어 국가 예산만 축낼 가능성이 높음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 도달 가능성이
의문시 여겨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과잉투자로 예산만 낭비하는 헬기들

현재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 공격헬기 개발, 대형 공격헬기 수입, 해상작전헬기 수입 등 다종의 헬기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북한의 기갑전력과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반도 지형과 북한의 전력을 감안할 때 필요성 문제가 지적받아 왔으며, 국회보고서도 작전 운용상 한계가 있다며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은 애초에 과도한 예산 낭비를 이유로 취소되었던 사업임에도 재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재정 먹는 하마, 헬기도입사업

정부는 지난 4월 1조 8400억원 규모의 대형공격헬기 도입 사업 기종으로 아파치가디언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5890억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AW-159 8대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아파치가디언은 운영유지비가 가장 비싼 헬기이며, 해상작전헬기는 대당 700억이 넘는데도 작전요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무용지물 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원거리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기 위해 추진되는 해상작전헬기의 작전가능 시간이 애초 해군이 밝힌 2시간과 달리 고작 38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도입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헬기 전력

- 우리나라는 현재 헬기 70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북한 보유 헬기전력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수치임. 따라서 헬기전력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헬기 도입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음.



남북 헬기전력 비교

현재 한국은 세계 6위의 헬기 보유국으로, 실제 북한보다 2배 이상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어, 전력 공백의 우려가 없는 무기임. 따라서 추가적인 헬기 도입은 과잉 전력 추구이며 국가예산 낭비임
출처 : 2012 국방백서

중복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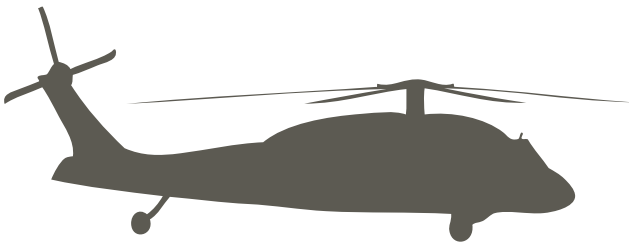
- 한국형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대형공격헬기와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함으로써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음

군사적 타당성 결여

- 헬기 자체는 전술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군사적 타당성이 논란이 많은 무기이며, 실제 전 세계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전력임. 또한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헬기의 생존률이 떨어져 효과가 의문시됨.

불투명한 사업결정

-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으로 아파치헬기를 도입하기로 한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음. 소형공격헬기 개발계획은 아파치헬기 도입을 위해 공격헬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음.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가디언 36대 도입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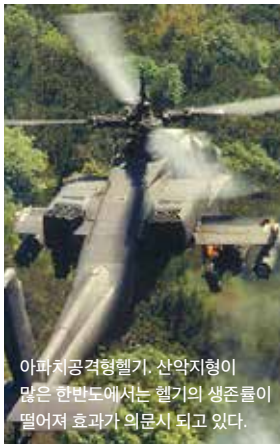
1조 8400억원



전국 지방의료원 34곳의 적자

655억원 X 28년간

메울 수 있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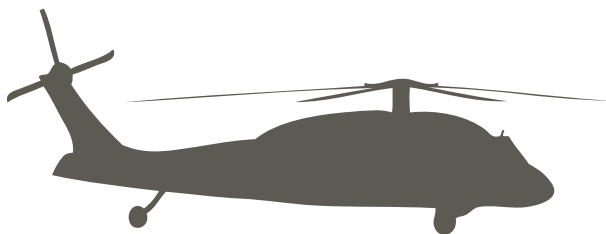
아파치공격헬기.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헬기의 생존률이 떨어져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도입의 문제점

- 단종될 부품 30년치를 미리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비용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예정. 이미 17개 부품은 단종 되었음.
- 한국과 같은 산악지형에서는 롱보우 레이더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힘들어 작전능력이 떨어짐.
- 가격문제로 한국에 판매하는 아파치의 경우 해상작전에 필수적인 염분 코팅작업을 엔진에만 적용함. 이 때문에 해상작전을 장기간 투입될 경우 동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막대한 투자에 비해 이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국형 헬기 수리온



기동헬기 총 사업비 **9조 1028억원** =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1.5조원 X 6배**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비용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6배에 달함

경제적 타당성 희미한 한국형 헬기개발 사업

국방부와 헬기 개발 업체는 기동헬기의 주요 구성품의 70%를 국산화했고, 앞으로 핵심 기술을 더 확보한다면 공격헬기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헬기를 국산화하면 헬기 수입 비용이 절감되고 해외 헬기 시장에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헬기 개발사업은 투여한 막대한 예산에 비해 이익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장이 작아 수출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예산 사용

- 기동헬기의 경우 교체 대상 기종은 1대당 평균 10억 원인데 비해 이를 대체하려는 한국형 기동헬기는 대당 200억에 달해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육박함

고비용 대비 낮은 이익

- 엄청난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성화, 고용창출, 투자 효율 등이 불분명한 사업임. 한국개발연구원, 감사원 등에서도 편익 계산은 엄밀한 측정이 불가능하며 고비용에 비해 이익이 적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음.

수출가능성 희박

- 시장이 작아 수출 가능성도 매우 낮음. 게다가 해외 유명 헬기 기종에 비해 한국형 헬기는 비용이 비싸 수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에 드는 비용

총 사업비	개발 비용	양산 비용	운영유지 (30년)	양산대수	대당가격
9조 4788억 원	1조 3113억 원	4조 5325억 원	3조 6350억 원	245 대	185억 원 이상

→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Drone)

무인기란?

UAV(Unmanned Aerial Vehicles) 혹은 '윙윙 거리며 나는 수벌 같다'고 드론(Drone)이라고 불립니다. 조종사 탑승 없이 원거리 기지에서 원격 조종으로 작동하며 카메라를 장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아군의 희생 없이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미국 대테러전의 첨병.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파키스탄 국경 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시키면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무인기가 치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인기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경도, 예고도 없이 드론을 통해 진행되는 그림자 같은 전쟁은 국제법 위반, 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반 드론, 반미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키스탄 북서부지역 집중된 무인기 공습으로 2004년 이후 파키스탄에서만 최대 3천4백 여 명이 드론에 살해됐고 그 중 1/4이 민간인, 특히 176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된다. 공격 표적 1명이 살해될 때, 민간인이 49명꼴로 같이 희생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게임하듯 인명을
살상하는 드론,
과학기술 발전은
죄책감과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인간성을 상실한 게임 같은 전쟁

- 무인기는 전장에서 수천km 떨어져 있는 기지에서 마치 오락게임을 하듯 조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영요원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인명을 살상하게 만듦.

테러리스트와 민간인 구분 못해

- 원격으로 화면만 보고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정보가 잘못될 경우 민간인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제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입고 있음. 현재 무인기 사용이 가장 집중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 미국은 이 지역의 무장 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저항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집중적인 무인기 공습을 가하고 있음.

동북아 긴장 높이는 더러운 드론

- 동북아 국가들 간에 무인 정찰기 ‘드론’ 경쟁이 불붙은 상태임. 중국은 이미 수천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유권 분쟁 지역의 무인기 감시 체제를 2015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다롄과 잉커우 두 곳에 무인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임.
- 한국도 5천억 원을 투입해 무인 공격기 개발 착수(2013년)한 것은 물론 2014년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사업 등 무인기 분야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고 있음.
- 일본 역시 센카쿠 열도 등 영토분쟁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무인기 도입 등을 기정사실화 함. 2014년 봄 미국은 일본에 북한과 중국을 감시할 다목적으로 무인정찰기 드론을 배치하기로 결정함. 최근 중국이 센카쿠 인근에 무인 정찰기를 보내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 때마다 일본은 F-15 전투기를 보내 영유권 분쟁 지역의 영공 내 갈등도 높아짐.



고성능 전차 꼭 필요한가?

현재 한국 육군은 이미 충분한 전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 최고 성능을 목표로 최첨단 차세대 국산 전차(K2, 일명 흑표전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수백대 양산에 2조원 이상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K2 전차 같은 지나치게 고성능 전차를 추가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은 과도하고 불필요하며, 개발 자체도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 계속해서 막대한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산무기 개발 계획은 항상 기술 도달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총 투자비 1175억 들인 K-2전차 (정부 725억원, 업체 450억원)

동력장치 18개 항목 기준 미달로 결국 국산화 사업 또 연기

수출욕심에 무리한 일정으로 경험없는 업체 선정해 6년째 네번이나 연기사태

당초 2010년 12월까지 개발완료 목표였으나 잇따른 문제 발생으로 2014년 10월로 연기

차기 전차 K2 파워팩(엔진+변속기) 국산 개발과정 및 문제발생 경위

2005년 4월 파워팩 국산 개발 시작

2009~2012년 총 125건 결함 발생, 3차례 개발 완료 시기 연기

2012년 4월 파워팩 초도 양산분 독일제 수입 결정

2013년 4월 국산 파워팩 결함 재발생, 시험평가 중단

2013년 8월 국산 파워팩 시험평가 결과 작전요구성능 미달

2013년 10월 국산 파워팩의 K2 차기 전차 적용 시기 다시 연장(6~12개월)

불필요한 고성능 차기 전차 개발

- 비록 수적으로는 북한이 41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이 1980년대에 개발한 K1 전차보다 구형으로 질적으로 한국 육군의 기계화·기갑 전력에 월등히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임. 반면 한국은 이미 성능이 우수한 2400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적으로 K1A1 전차 성능개량 및 양산, K2 차기 전차 개발 및 양산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무리한 국산 개발이 불러온 부실

- 현재 개발중인 K-2 전차는 엔진 등 파워팩의 결함으로 개발시험평가에서 연이어 불합격되었고 3차례나 개발 완료 시기를 연기했음에도 최근 또 다시 개발 완료 시기를 연기함(엔진 개발은 12개월 연장, 변속기 개발은 6개월 연장).
- 결국 차기 전차 1차분 100대에는 679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독일제 파워팩을 수입해 달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미 1000억원을 들인 파워팩 개발에도 추가 비용을 더 들여야 하며, 수출 문제도 외국 부품업체와의 추가 협상이 필요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무기 수출을 명분으로 과잉 생산

- 군과 방위산업체는 국산개발안을 승인받고 생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무기산업의 장래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음. K2 전차 개발 시 터키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점을 예로 들고 있음.
- 그러나 계속된 개발 부실과 하자 발생이 지속된다면 현실적으로 수출 가능성은 밝지 않음. 개발에 참여한 수천개의 부품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일어날 수 있고, 업체의 도산을 막고자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임. K2 전차 파워팩 국산 개발이 결함으로 현재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평화에 반하는 대양해군의 꿈

해군은 이지스함을 필두로 대형수송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구축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동전단은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양해군’의 핵심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연안 경비 수준을 넘어 장거리 작전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전단을 포함한 대양해군 구축은 주변국과 불필요한 군사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양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꼭 필요한가?

한국은 현재 최첨단 이지스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비롯해 각종 무기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세종대왕함, 울곡이이함, 서해류성룡함 등 3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도 이지스함은 1척도 없으며 전통적 군사강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없습니다.

엄청난 건조비용과 유지비용

- 이지스함 보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엄청난 건조비용과 유지비용. 이지스함은 건조비용만 1조원이며 무장에 드는 비용을 합하면 1대당 1조 2~3천억원에 달함.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각종 미사일과 어뢰는 1기에 10~30억원이고, 이지스 레이더는 출력 용량이 4만 5천KW로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이 필요함.

이지스함 운용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

- 고가의 무기인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데에도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됨. 모든 장비가 최첨단이기에 유지하고 정비하는 일에만 많은 비용을 수반함. 운용 매뉴얼은 10만 페이지가 넘을 만큼 고도로 숙련된 운용 기술과 정비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도 엄청남. 이는 모두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게 됨.

대양해군은 군사갈등을 부추긴다

- 이미 한국 해군력은 북한에 비해 월등한 상황인데도 기동전단을 통해 주변국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을 부추기게 함. 게다가 장거리 작전은 한국 해군 혼자서는 불가능. 즉 해양패권국가인 미국에 협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한반도 범위를 넘어 전 세계로 넓혀 미 해군을 따라 한국 해군이 세계의 전장에 동참하는 것을 뜻함.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미국 해양패권에 편승하는 전략은 미·중 간의 대립에 한국이 휘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을 일으켜 동북아에서의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임.



최근 들어 제주남방 해역을 비롯한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이지스함 보유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체제 편입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격적 군사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은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 위험을 키우는 대양해군의 꿈

한국은 앞으로 3척의 이지스함을 더 구축할 계획인데, 그럴 경우 총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어 미국과 일본을 이어 세계 3위의 이지스함 보유국이 됨. 특히 이지스함 보유로 미국 MD(미사일방어) 편입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 미국은 한국에 끊임없이 MD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일 군사협력의 내용을 봤을 때 미국 MD 편입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게다가 최근 한국 정부도 고층 미사일 방어로 나아가려는 속내를 드러낸 바 있음. 이는 결국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 우리의 안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임.

21세기 ‘모순矛盾전쟁’

MD(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체계)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요격해 파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무기’의 역설

돈 먹는 하마

- 미국은 지금까지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었고, 한국이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요구해 왔다. 만약 미국의 바람대로 한국이 MD에 참여할 경우 그 비용으로 최소 2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연간 전체 반값 등록금 예산(4-5조원) 및 건강보험료 정부지원액(5조 3천억원)의 4-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비용대비 효과는?

- 실제 상황이 아닌 매우 제한적 상황을 설정한 실험에서도 지상요격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률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대표적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의 경우, 1차 걸프전과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불리며 그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미국 의회 조사위원회는 패트리엇(PAC-2)의 실제 스텔스 미사일 요격률은 10% 미만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요격률이 55%에 달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발표는 허위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 1기씩을 격추해 ‘아군 잡는 미사일’로 불린다.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체계, 이렇게 작동합니다



초기단계방어 Boost Defense Segment	중간단계방어 Midcourse Defense Segment	최종단계방어 Terminal Defense Segment
상대의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대기권에 진입하기 직전까지의 단계	미사일이 고도 100km의 대기권을 돌파하는 우주비행단계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최종 단계
항공기탑재레이저(ABL, Airborne Laser) 항공기에서 고에너지 레이저빔을 쏘아 상대의 미사일을 추진단계에서 요격	지상발사형중간단계방어 (GMD, Ground-Based Midcourse-Defense) GBI 미사일, X밴드 레이더 등으로 구성되며, 지상에서 발사돼 대기권 밖의 탄두미사일을 요격 이리스탄도미사일방어(ABMD,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이지스함에 장착된 스탠드드미사일(SM) 등을 발사해 해상에서 요격	패트리엇3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대표적인 탄도탄요격미사일로서, 지상에서 발사, 요격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최대 150km 고도까지 도달이 가능하며, 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
		

MD는 정말 방어용 무기일까?

-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공격력을 보유한 미국은 MD의 필요성을 말할 때, 군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강조해왔다. 이는 MD 보유가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MD에 대한 불안감은 너도나도 방어용 무기를 개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공격용 무기의 개발을 촉진시켜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된다. 실제로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은 MD에 대항해 핵전력을 보다 강화해왔다.

‘우주전쟁’ 앞당겨

- MD개발은 군비경쟁을 우주로까지 넓힘으로써 ‘우주 전쟁’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주의 군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주 지배를 향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맞서 우주 공간의 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해왔으나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를 반대해왔다.

MD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 미국 MD 편입은 동북아 냉전의 시작

중 국

- 미국 MD체계가 중국에 가장 큰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MD에 대항해 신형 전략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러시아

- 동유럽 미사일방어기지 계획을 포함해 미국의 MD체계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축협상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일 본

-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MD 배치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MD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독자적 MD체제를 개발 중이다.

북 한

- 미국이 MD 강화의 명분으로 북한 위협을 드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판 냉전 전략의 산물이며, 미국의 MD 체계는 중국, 러시아 견제 및 군사적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한국의 선택은?

- MD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실익과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주도의 MD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한된 미사일방어체제, 즉 하층 방어 위주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과 한미동맹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독자적 MD 구축이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또한 최근 국방부가 중·고고도방어(THAAD)체계와 SM-3를 포함하는 이른바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 MD’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시 미국 주도의 MD체제 구축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MD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중관계를 매우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이는 동북아가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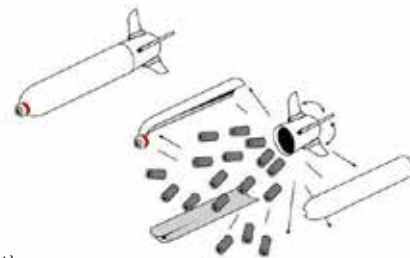


함대공 요격미사일인 SM-2를 탑재한 세종대왕함(좌). 한국군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우).

죽음의 비 확산탄



대표적 비인도무기 확산탄, 폭발하지 않은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하다.



확산탄(Cluster Bomb)이란?

- 확산탄 또는 집속탄, 모자(母子)탄, CBU(Cluster Bomb Unit)
- 한 개의 확산탄 안에 수십, 수백 개의 소폭탄이 가득 채워져 있어 공중에서 터지면서 안에 들어있는 작은 폭탄들이 흩어지며 연쇄적으로 폭발
- 넓은 지역에서 다수의 무차별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인살상용 산탄형 폭탄
-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
- 보통 축구장 3~4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
- 폭발하지 않은 불발탄은 이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다가 지뢰처럼 작용

“2003년 어느 날, 난 두 아들과 함께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물 속에서 폭탄을 발견했는데,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욕심으로 그 폭탄을 강가로 건져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손에서 터졌고, 나는 내 두 팔을 잃었습니다. 이제 난 양팔이 없으니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 확산탄으로 인해 두 팔을 잃은 라오스의 드타르(Dtar)



“여동생은 그것을 발견해서 내게 가져다주었어요.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집자마자 폭발하여 손을 다쳤어요. 엄마는 나를 의사에 데려갔지만 손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울기 시작했고 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폭발할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청각에도 큰 손실을 주었어요. 이후로는 잘 듣지도 못해요. 옆에 있었던 여동생도 청각을 잃었고,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어요.”

- 남부 레바논의 12살 소녀 자하르 (Zahra)



확산탄의 민간인 피해

- 2003년 이라크전쟁 : 3주 동안 미국 1만 782발, 영국 2,170발 사용.
뿌려진 소폭탄 수는 모두 200만 개. 그 중 약 9만 개가 불발탄으로 추산(출처 : 휴먼라이츠워치)
-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 약 400만 개의 소폭탄 사용. 그 중 100만 개가 불발탄(UN)
- 라오스 : 8천만 개의 소폭탄이 불발탄으로 남아 수천 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계속 발생



민간인 대량살상으로 악명높은 확산탄, 다련장 로켓(MLRS)

다련장 로켓시스템(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은 지대지 로켓 및 유도탄 사격체계로서,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 무기입니다.

로켓탄 1발은 축구장 3개 면적(6000평)을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1분 동안 1개 포대(3문)에서 2만 3천개의 소폭탄을 목표지역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성능으로 인해 걸프전 당시 미국이 사용하면서 '강철의 비를 뿌리는 무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다련장 로켓 중 3가지 무기가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양산했으며 그중 93%가 민간인으로 밝혀져 시리아에서 사용된 '더러운 무기' 12가지(재래식무기)로 꼽혔을 만큼 비인도성이 높은 무기입니다.

한국형 대량살상 무기 천무

한국형 대량살상무기 천무는 초기 MLRS 모델인 구룡의 노쇠화와 미국산 M270의 고비용으로 인해 자체개발하여 2014년 전력배치 예정입니다.

현재 130mm/230mm 무유도로켓, 239mm유도로켓(단일탄두/분산탄두)이 사용가능하며, 이 외에도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확산탄이라는 에티타킴스(ATACMS, 1발 가격은 13억원)와 소형무인기 발사가 가능한 무기입니다. 특히 239mm 분산탄두는 인명살상과 차량 및 구조물 파괴의 이중목적탄(DPICM)이 탑재되는데, 이는 한국이 보유한 DPICM은 국제기준인 불발률 1%을 초과합니다.

이에 따라 천무를 통한 239mm 분산탄두 사용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와 불발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비인도무기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강철의 비”라고 하는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진 다련장 로켓. 확산탄을 발사하여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다.

→ 민간인 살상 제조기 ‘소형무기’

소형무기란?

소형무기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권총, 기관단총,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산탄총, 로켓추진유탄발사기 및 휴대용 미사일 등의 소형무기와 경무기를 지칭합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으며 매년 약 800만개가 소형무기시장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현대 분쟁의 민간인 사상자 제조기

- 소형무기는 다른 무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불법 거래량(1조7백억 규모,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의 10-20% 내외로 추산)이 많으며, 이들 소형무기는 전 세계의 분쟁지역으로 밀반입되어 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음(global issue, small arms survey). 현대 분쟁의 민간 사상자 중 약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80%는 여성과 아동임.



“소형무기는 테러, 해적행위 등 국가를 초월하는 각종 조직범죄와 연관돼있다. 국제사회의 평화구축 노력에 장애가 되며 민간인과 평화유지군,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이다.”

- 2013. 9. 26. 줄리 비숍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대표, 호주 외무장관)



“그들은 우리에게 총 쏘는 법, 사람들 심장과 발을 겨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얀색의 가루가 섞인 밥과 빨간색 가루가 섞인 소스를 먹어야 했습니다. 주사도 맞았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맞았어요. 주사를 맞고 가루가 섞인 밥을 먹으면 저는 모터가 달린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적들은 개처럼 보였고,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들을 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 말리 세구아에서 포로로 잡힌 한 소년병의 이야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 홈페이지 인용)

소년병들에게 지급되는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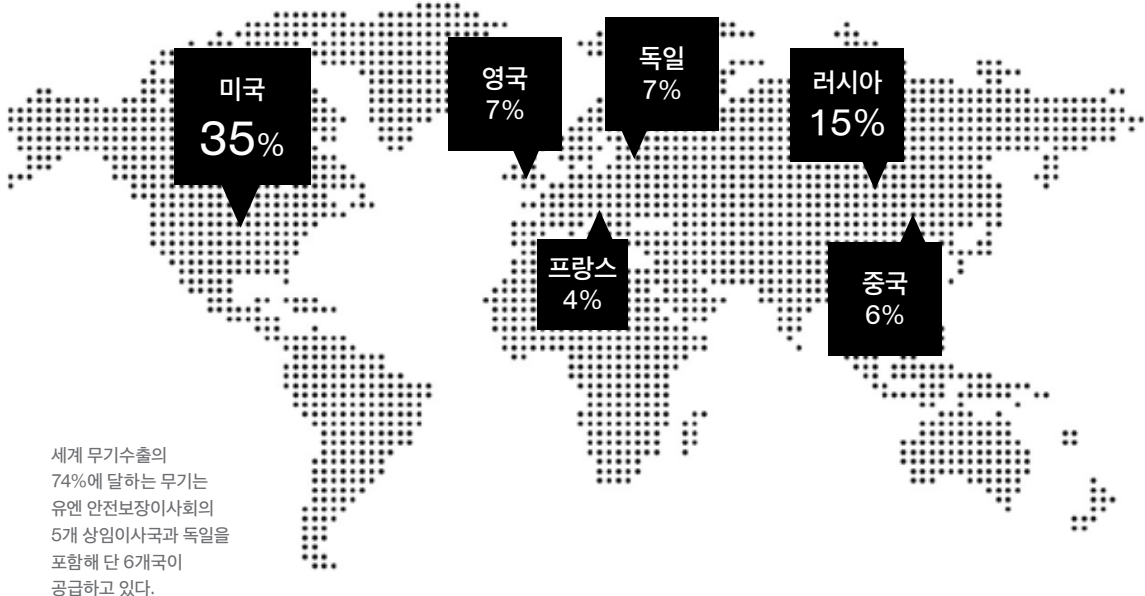
- 또한, 소형무기는 휴대가 용이하고 조작이 단순하기 때문에 18세 이하의 소년병들의 주요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에는 약 30만 명 규모의 소년병들이 있는데 수년간 200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6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살아가고 있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 홈페이지)
- 한국의 소형무기 수출 규모(한화 1,800억원)는 세계 10위권에 속하며, 무기거래 투명도는 52개국 중 31 위인 것으로 파악 됨(small arms survey 2012). 특히, 한국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바레인, 이집트 등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분쟁지역으로 소형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을 잠재적인 수출 확대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음(한국국방연구원,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분석 및 수출전략 수립, 2007). 또한, 합법적인 무기거래와 불법무기거래의 높은 연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소형무기 10대 수출국인 한국도 소형무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무기거래량 전 세계 약 70% 차지

- 미국 전 세계 1위 무기거래국으로, 170개국에 넘는 곳에 무기 공급.
이집트의 중요 무기 공급처이며,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한 화학제품 등을 공급
- 러시아 무기수출액 세계 2위로, 시리아의 최대 무기 공급 국가
- 영국 재래식 무기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세계 5위 안에 들며, 일반적으로 무기거래 기준 준수하고 있으나, 스리랑카를 포함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무기 공급
- 중국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수단 다르푸르 지역으로, 리비아 알-카다피 군에게 로켓과 대전차 지뢰가 공급되었음
- 프랑스 기본적으로 엄격한 무기거래 기준을 지키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 이집트, 차드, 시리아 등으로 무기 공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무기거래국?



무기는 어떻게 국경을 넘어 분쟁지역으로 흘러가는가

무력분쟁과 무장폭력으로 인해 1분마다 1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2,600만 명의 사람들이 무력분쟁으로 인해 고향에서 쫓겨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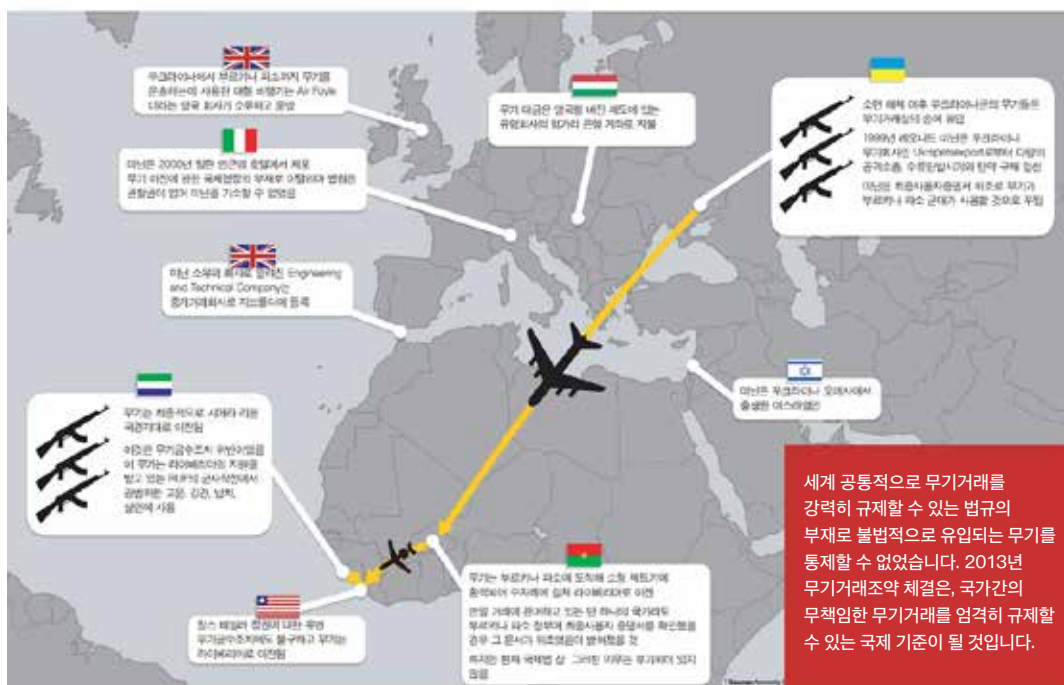
불법 무기거래로 어린 아이들의 손에 무기가 쥐어지고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천, 수백만 명의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하는 분쟁지역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무기의 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많은 무기는 어떻게 국경을 넘어 분쟁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시에라리온까지





STOP ADEX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

비인도적 무기 생산을 막고, 무책임한
무기거래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핵으로부터의 위협을 없애며,
군비경쟁과 공격적 무기 도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세금을 군비 대신 복지비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시민이 제안합니다.

확산탄금지협약 / 비인도적 무기생산 중단하라
무기거래조약 / 무책임한 무기거래 중단하라
No 핵무기 Yes 비핵지대 / 비핵지대, 핵무기 얼씬도 하지마
실현가능한 꿈, 군축 /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평화국가 / 시민이 만드는 평화



자국의 확산탄 금지협약 참여를 촉구하는 시민들



2008년 107개국의 만장일치로 확산탄금지협약이 탄생했다.

비인도적 무기, 확산탄 생산 중단하라



확산탄금지협약이란?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은 확산탄의 사용, 생산, 이전, 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확산탄을 보유한 국가들의 비축분 전면 폐기, 오염 지역 정화, 확산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입니다.

그동안 확산탄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확산탄은 사용할 때는 물론 사용후에도 대량으로 남겨진 불발탄으로 오래동안 민간인을 공격하기 때문에 1997년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지뢰 이래 확산탄은 가장 심각하게 민간인을 위협하는 무기로 손꼽혀왔습니다.

다시 말해 확산탄금지협약은 무고하게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비극을 막고자 국제적인 확산탄금지운동이 이끌어 낸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확산탄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 국가와 NGO들이 모여 2008년까지 확산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을 만들자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 오스트리아, 2008년 2월 뉴질랜드에서 주요 회담이 열렸으며, 결국 200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07개국의 만장일치로 확산탄금지협약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생산국이 참여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지만, 2013년 현재 전 세계 112개국이 협약에 가입해 확산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확산탄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한국의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시민들

확산탄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 한국

불행하게도 한국은 아직까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 세계의 확산탄 금지 및 폐기 노력에 역행하여 오히려 확산탄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불발탄의 문제는 기술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기술적 발전으로 불발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전 상황에서는 불발률이 10%가 넘기도 하며 1%의 불발탄만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실제 2006년 레바논 남부에는 불발률 1%라고 주장된 확산탄 약 400만발이 뿌려졌는데 1%의 불발률이라면 4만발의 불발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실제로는 25% 가량, 즉 100만발이 불발탄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확산탄 자체의 비인도성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확산탄으로 발생하는 사상자의 98%는 민간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폐기하기로 결정된 무기를 한국이 생산하여 수출까지 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 풍산과 한화

한화 MLRS(다련장 로켓시스템)용 로켓탄과 헬기,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확산탄을 생산하며, 70mm 다련장과 차기 다련장을 개발했고 2008년 파키스탄에 확산탄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풍산 주로 대포에 쓰이는 확산탄을 생산하며, 2004년 파키스탄과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입니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한화와 풍산 두 회사를 확산탄을 생산하는 비윤리적 기업이란 이유로 투자대상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받고 있는 셈이지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한국의 금융기관, 기업들 또한 확산탄 생산기업인 이 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목숨을 노리는 무기를 판매해 누군가는 돈을 버는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일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확산탄 문제에 쏟아진 국제적 관심에 비해 한국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랑스러운 한국군 무기로 확산탄을 소개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확산탄을 수입해 신형 확산탄을 계속 확보하고 있으며 구형 확산탄의 폐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확산탄 생산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무기거래 중단하라



매일 무기로 목숨을 잃는 2000명을 기리며...

2013년, 강력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 탄생하다!

2013년 4월 유엔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역사상 최초로 세계 공통의 재래식 무기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이 탄생했습니다. (2013년 4월 2일, 찬성 155, 반대 3, 기권 22)

단언컨대, 무기거래조약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 국제거래 규제의 엄격한 국제공통기준 설립 또는 규제를 향상시키고,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와 전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적/국제적 평화, 안보, 안전에 기여하며 인권침해를 줄이고, 재래식 무기의 국제이전에 있어 당사국들의 협력, 투명성,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서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무기거래조약에 통제 대상에는 전차, 장갑차, 전함, 공격헬기, 전투기, 박격포, 미사일/미사일 발사 장치, 소형·경무기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산 체류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5세 바레인 소년, 사예드 하심 사이드 Sayed Hashim Saeed.

이 사진은 바레인으로의 체류탄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사이트 "Stop the Shipment" 첫 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참조 www.stoptheshipment.org

무기거래조약은,

모든 인권침해 상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수십 억 명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국제적인 밑바탕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무기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범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기거래조약 비준과 발효,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무기거래조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50개 국가의 비준이 필요.

50번째 국가가 비준한 90일 이후, 조약은 발효하게 됨

현재 서명국 113개 비준국 7개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무기거래조약 비준하라!

2012년 지금까지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이집트에 한국 무기 공급

2013년 5월, 터키 시위대의 과도한 무력진압 현장에서 한국산 최루탄 발견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에 무기류를 공급하는 한국 정부에게, 우리는 요구한다!

- 이집트, 터키 혹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의 무기 공급을 엄격히 검토하고 필요 시, 무기 이전을 중단할 것
- 무기거래조약 비준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법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할 것
- 무기거래조약 서명국으로서,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제6조(금지)와 제7조(수출 및 수출평가)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

비핵지대, 핵무기 얼씬도 하지마!



“우리가 뭘 한거지? 우리가 뭘 한거야?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돼!” -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맨하탄 프로젝트’ 책임자 오펜하이머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으나 엄청난 인명피해와 가공할 파괴력을 보고 핵무기 철폐를 위해 나서게 됨.

핵무기? 인간이 개발한 인류절멸의 무기!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에너지를 이용한 무기들의 총칭입니다. 핵무기는 군대를 공격하려고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라 민간이 밀집지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안된 대량살상무기이자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입니다.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온 원자폭탄

-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으로 약 22만 5000명 사망자를 포함 70만명의 인명피해 발생.
- 이중 95% 이상이 민간인이었고 대부분 여성이거나 어린이였음. 그나마 살아남은 생존자의 절반 이상도 몇 달 내에 방사능 중독으로 사망.
- 45개의 공립병원 중 42개 전소, 전화 및 통신시설 80% 소실, 전차 65% 파괴.
- 특히 폭심지에서 1.5km 이내의 전차는 모두 파괴됨.

핵위협에 의존하는 군사전략 용납해서는 안 돼

핵무기는 대량파괴와 민간인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반인도적인 무기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실험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 핵무기를 억지수단으로 하는 군사전략, 즉 상대방 민간인에 대한 핵위협에 의존하는 군사전략 역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 ◀ 2010년 NPT 검토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회원국간의 합의사항이 담긴 결과문서를 채택했다.
- ▶ 2010년 NPT 검토회의가 열린 뉴욕 유엔 본부 근처, 국제 시민사회의 핵무기 철폐 캠페인 모습.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핵군축 5개항’ 제안 Five-Point Proposal for Nuclear Weapons

2008년 10월 24일 반기문 사무총장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고, 교착상태에 빠진 핵 군축 논의를 되살리기 위해 핵군축 5개항의 안을 제안했습니다.

5개항은 △핵보유국들의 군축 협상 약속 이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군축 관련 논의 개방 및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금지를 약속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발효 및 중동을 포함한 핵무장 금지 구역 설정과,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고, △유엔총회의 ‘세계 군축 정상회담 개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핵확산금지조약 NPT 발효 (1970년)

NPT 가입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 이용을 보장하는 대신 핵무기 보유는 금지하고, 기존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군축을 권고하는 조약.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핵사찰도 받아야 하는 반면, 핵보유국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한다고만 명시한 불평등 조약이어서 비핵국가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음.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발효 시도 (1996년-)

군사적/평화적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CTBT는 발효를 위해서는 당시 원자력 발전능력을 보유한 44개국의 가입을 조약 발효 조건으로 명시. 미국, 중국, 이스라엘은 서명만 한 상태이며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서명도 하지 않았음.

전략무기감축협정(The New START)

2010년 4월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은 새 전략(핵) 무기감축협정(The New START) 서명하여 2천 200기 장거리 핵탄두 → 1천 500기 수준으로, 지상 및 해상배치 미사일 등을 현행 1천 600기 → 800기로 감축하기로 함.

핵무기협약안(NWC)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이전, 사용 및 사용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핵무기 사용자체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함. 반핵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2010년 NPT 재검토회의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핵무기협약 체결 요구.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반대,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은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조약화되지 못하고 있음.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 (FMCT)

▷생산금지 대상에 기존의 비확분의 포함 여부 ▷ 핵물질의 정의와 범위 ▷ 검증체계 합의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약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음.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 국제협정 체결(NSA)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 비핵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함. 이스라엘과 한국은 NSA 관련 유엔 결의안에 대한 기권하고 있음.



'핵 없는 세상'을 약속한
오바마 미 대통령.
그러나 최대 핵 보유국
미국, 핵군축에 가장 반대.

‘핵 없는 세상’ 말하면서 핵 포기 못하는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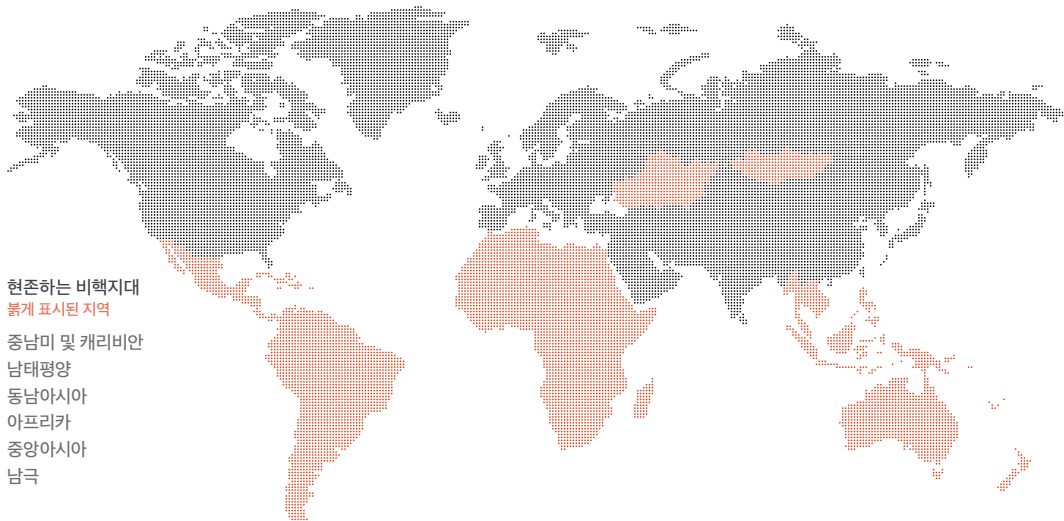
최대 핵보유국 미국, 핵군축에 가장 반대

한국, 일본 비핵보유국이지만 높은 기권을 보이며 상당히 소극적

- 미국 오바마 취임 후 100% 반대에서 70% 반대. 세계 핵탄두의 40% 이상을 보유한 국가로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핵군축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스라엘 가장 낮은 찬성률. 핵무기를 보유에 대해 NCND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핵군축·비확산 체제에 커다란 걸림돌이자 이중 잣대 논란의 장본인으로서 핵확산의 구실 제공
- 한국, 일본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 높은 찬성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절반 수준의 찬성률을 보임 (한국 54%, 일본 62%). 특히 이 두 국가는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의 무이행’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결의안’에 기권을 함.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이는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것 역시 핵군축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비핵지대란(Nuclear Weapon Free Zone)?

핵무기 자체가 완전히 부재하고 핵무기 사용이 금지된 지역을 말함.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실험, 사용, 제조, 생산, 획득 등 어떤 방식의 보유도 삼갈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내에 제3자의 핵무기 수령, 보관, 설치, 배치도 금지함. 핵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 이행.





2010년 NPT 재검토회의에서 열린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한일공동워크숍' | 2010년 2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한일 의원-시민사회 포럼

동북아 비핵지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

3+3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

- 한국, 북한, 일본의 3개국의 비핵지대조약 체결해, 미국, 러시아, 중국이 남북일에 대한 핵공격이나 핵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

'북핵 폐기'를 넘어서

-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과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 계획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있음.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화 흐름이 조성되면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는 약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동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비핵국가만이 아닌 주변 핵보유국의 핵군축도 촉진

-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변 핵보유국이 남북일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핵으로 비핵국가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장하고 서로 간에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No First Use) 약속함으로써 핵 제조 능력을 사실상 갖춘 비핵 3개국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나아가 핵보유 3개국도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압박할 수 있음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경과

1996년 5월, 우메바야시 히로미치(피스데포 특별고문), '3+3구상' 발표

2003년 4월, 제네바 NPT재검토준비위원회 회의, 각국 정부대표들에게 '3+3구상' 제기

2003년 11월, 참여연대 SBS 주최 국제평화회의, '3+3구상' 발표

2004년 4월, 뉴욕 NPT 재검토 준비위원회, 피스데포와 평화네트워크 공동주최 워크숍, '3+3구상'에 기반한 조약 모델 제안

2005년 2월, GPPAC(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회의, 동북아행동의제로 동북아비핵지대화 채택

2010년 2월, 한일 시민단체와 PNND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한일국제회의' 개최,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의원 공동성명' 발표

2010년 5월, NPT 재검토회의, 한일 국회의원, 시민단체, 일본 자치단체장 공동주최로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공동워크숍' 개최

2011년 3월, 한일 PNND 주최로 '동북아비핵화를 위한 한일포럼' 개최

2013년 6월, 한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반핵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가해 "동북아 평화 및 안보 체제를 모색하며: 동북아의 새로운 출구모색"이란 주제로 '글로벌 시민평화포럼' 개최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초대형 무기 증강 사업들

국가예산에 대한 고려와 적절한 평가 없이 초대형 무기 증강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구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현실성 결여 문제로 사업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 KF-16 전투기 성능 개량사업(1조 8,091억원), ▷ 육군의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1조 8384억원), ▷ 해군의 해상 작전헬기 도입 사업(5538억원), ▷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3,800억원)은 2012-2013년에 기종 또는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진행 중. ▷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8조 2905억원), 기종선정이 무산되어 재추진되고 있고 ▷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5,002억원) 역시 미국이 제시한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여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초대형 무기 증강사업, 군수업체 배불리기

이에 따라 한국은 외국의 무기 군수업체들에게 '큰손'이 되었고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은 해외 군수업체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한국은 지난 5년간(2008~2012) 세계 2~4위의 무기 수입 국가였으며 미 국산 무기 수입은 세계 1위였음(SIPRI)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무기 도입(수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무기 증강 사업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8조 2905억원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1조 8384억원
해상 작전헬기 도입 사업	5538억원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1조 8052억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5002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	3800억원



군비증가 No! 복지에산 증가 Yes!

국방비 VS 복지비

무기수입 세계 2위, 국방비 지출 세계 12위, 교육비 23위, 사회복지비 33위

순위	무기수입 (%)	국방비 (억 달러)	교육비 (%)	사회복지비 (%)
1위	인도	미국 6,896	노르웨이 9.0	프랑스 28.4
2위	한국	중국 1,293	덴마크 7.7	스웨덴 27.3
3위	파키스탄	러시아 641	아이슬란드 7.6	오스트리아 26.4
4위	중국	프랑스 582	스웨덴 6.8	벨기에 26.3
5위	싱가포르	영국 579	벨기에 6.5	덴마크 26.1
6위	호주	일본 545	뉴질랜드 6.4	독일 25.2
7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462	핀란드 6.1	이탈리아 24.9
8위	미국	인도 443	이스라엘 5.9	핀란드 24.8
9위	아랍에미리트	독일 435	아일랜드 5.7	헝가리 22.9
10위	그리스	이탈리아 319	에스토니아 5.7	포르투갈 22.5
11위		브라질 316	프랑스 5.6	스페인 21.6
12위		한국 283	오스트리아 5.5	그리스 21.3
13위		캐나다 231	네덜란드 5.5	노르웨이 20.8
14위		호주 230	미국 5.4	룩셈부르크 20.6
15위		터키 187	영국 5.4	영국 20.5
16위			스위스 5.4	슬로베니아 20.3
17위			슬로베니아 5.2	네덜란드 20.1
18위			폴란드 5.1	폴란드 19.8
19위			헝가리 5.1	체코 18.8
20위			멕시코 4.9	일본 18.7
21위			캐나다 4.9	스위스 18.5
22위			포르투갈 4.9	뉴질랜드 18.4
23위			한국 4.8	캐나다 16.9
24위			스페인 4.6	아일랜드 16.3
25위			이탈리아 4.6	미국 16.2
26위			칠레 4.6	호주 16
27위			독일 4.6	슬로바키아 15.7
28위			호주 4.2	이스라엘 15.5
29위			체코 4.1	아이슬란드 14.6
30위			슬로바키아 3.6	에스토니아 13
31위				칠레 10.6
32위				터키 10.5
33위				한국 7.6
34위				멕시코 7.2

2007-2011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
국 The recipient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2007-2011

출처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1

2011년 국방비 지출순위 The 15 countries with the highest military expenditure in 2011, 2010년 US\$ 불변가격 기준

출처 SIPRI Yearbook 2012

"2008년 GDP 대비 공공 교육비 비율 2008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 OECD 2011

GDP 대비 정부지출 사회복지비 Government social spending: Total public social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Last updated: 11 Sep 2012



전세계 군사비 \$1조 7730억

- 아프리카 \$383억
- 아메리카 \$7680억
- 아시아/오세아니아 \$3820억
- 유럽 \$4190억

한국 2014년 국방예산안 35.8조원... 매일 980억원씩 국방비로?

- 한국의 군사비 지출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합니다.
-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비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보다 조기 퇴직과 해고, 실직에서 오는 불안감, 높은 등록금과 보육료에서 오는 불안감 등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을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4년 국방비 동결시 1.5조원 절약 가능

- 2014년도 국방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면, 절약한 1.5조원을 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5조원이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1.5조원) 실현 또는 초·중학생 548만명 전면 무상급식(1.9조원) 충당이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내 삶의 위협?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초대형 무기 증강사업에 쓸 것인가, 복지비에 쓸 것인가 하는 결정에 시민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납세자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기밀주의와 전문가주의를 제거하고 국방관련 부문과 국방 외 부문, 그리고 시민 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MDG 달성 비용

3290억 원

전세계 군사비의

20%에 불과

출처 <Whose Priorities?>

International Peace Bureau



1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1020억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72억



3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권리 향상
\$72억



4

유아사망을
감소
\$100억



5

산모의
건강증진
\$100억



6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142억



7

지속가능한
생태만들기
\$1556억



8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400억

전세계 국방비가 빈곤해결에 쓰인다면!

국방예산이 많을수록 시민들이 안전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미국 시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과도한 국방예산은 때때로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국의 군사비 증액에 대응하여 경쟁적으로 군사비를 증액한다면 안보딜레마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엄격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줄일 수 있는 군사비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보육, 등록금, 주거 문제 등의 해결에 군사비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민이 만드는 평화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살상무기를 전시하고 거래하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많은 무기증강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복지공약을 후퇴시키면서도 왜 매년 34조 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지난 20여년간 남한은 북한 군사비의 약 10배를 지출해왔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지출한 군사비는 북한의 전체 국민총생산(GDP)에 맞먹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비를 지출해왔지만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군비경쟁에 뒤흔쳐진 북한의 군부는 핵무기와 미사일 같이 살상력은 높고 비용은 적게 드는 무기개발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소위 군사전문가들은 늘 외부의 위협을 퇴치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집착할수록 상대방에서도 군사력에 대한 집착이 강화되는 악순환만 이어집니다. 또한 미, 일, 중 등 주변국들 역시 한반도 상황을 빌미로 경쟁적으로 최첨단 기술의 무기를 개발하고 군비 확장과 군사력 과시를 위한 연합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미국, 일본,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을 해서 승산이 있을까요? 군비를 늘리고 무기를 계속해서 증강할수록 도리어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군비경쟁과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정부를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만 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

한반도 갈등을 끝내고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질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군사력 강화전략은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어 왔지만 현실의 갈등해결에는 실패해 왔습니다. 이미 실패한 방식을 반복하기보다 보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우선 한반도 군사긴장의 원인이 되는 휴전상태의 불안정한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한과 미국 등 교전 당사자간 국교정상화 등 우호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좌측은 한미일 해상훈련 중인 함정, 우측은 중-러 해상훈련 모습이다. 동북아에는 대규모 해상훈련을 통한 군사력 과시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극적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공격적인 군사계획을 방어적인 수준으로 수정하는 것에 앞장서야 합니다. 더불어 주변국과도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중국과 갈등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원치않는 동북아 군비경쟁에 휘말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동북아 나라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평화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입니다.

갈등 예방이 가져다주는 혜택

군사적 적대행위와 군비 경쟁이 반복되는 상황을 대화와 협력의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려면 사후적이고 군사적인 방식의 대응보다 예방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갈등과 위기를 조기에 예방하고 치유할 민주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주변국들과의 대화와 협력외교를 추구하고, 상대방을 압도할 군사력을 형성하기 보다 방어에 충분한 합리적 수준으로 군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살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는 무기산업과 군사기술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민주적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상호공존의 질서를 마련하고 내부적으로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을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적정 수준 이상의 국방예산을 감축해 그 재원을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보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민들

복지국가의 필수조건, 평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들이 하나같이 경제를 민주화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리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군사비, 그리고 군사력 형성만 안보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의 확충에는 무관심한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회적 양극화와 높은 자살율이 전쟁에 맞먹는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여기에 사회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복지를 요구하고 군비축소를 주장하는 것을 중복이니 좌익분자로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안보국가, 관료국가에서 평화국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이 만드는 평화복지국가

정부 스스로 군비증강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국가권력이 외부위협이나 국가안보를 내세워 손쉽게 시민들의 복지나 민주주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은 그 예입니다. 따라서 안보 관료들에게 문제를 맡겨두지 말고 시민 스스로 진정한 안보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과연 외부로부터의 위협인지 아니면 사회적 정의의 실종과 각종 사회적 폭력의 구조인지, 만약 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비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평화를 기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평화와 정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가적, 사회적 폭력에 민감하게 저항하고, 흑백논리와 휘발성 강한 회오리 여론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너-우리-우리 밖에 대한 협소한 경계를 깨고 우리 스스로의 편견과 불합리한 이중기준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분쟁갈등 해소를 위한 관용과 대화의 문화를 형성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사회가 평화롭고 정의로워지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주의와 안보담론을 깨기 위해 평화 활동에 나선 시민들

평화, 시민이 만들어 갑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 백범 김구 선생님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나라 중에서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평화군축박람회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비증강과 무기도입 및 개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정작 뒷전으로 밀려난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투자를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평화·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결국 수많은 민간인들을 다치거나 죽게 만들고
이들의 터전을 파괴할 뿐이며, 결코 분쟁과 군비경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2013. 10. 28~11. 3

2013 ADEX(무기전시회) 대응 캠페인

주최 시민단체 22개 개척자들,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남북평화재단,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 문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생명평화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청년좌파,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평화의친구들, 평화통일시민연대

주관 2013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문의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평화군축박람회의 서포터즈가 되어주세요!

평화와 군축에 대한 담론으로 평화로운 세상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세요

후원금은 평화군축박람회 활동경비로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1-855692 참여연대 평화군축박람회

본 책자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기금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표지디자인 ©atopy